

[종합·해설]

총선 D-12

광주·전남 관전 포인트

무소속 몇 석이나? 신인들 성적표는?

◇무소속 약진=광주 남구에서는 강운 전 내무부장관이 무소속으로 출마, 민주당 공천을 확정짓고 재선사냥에 나선 지병문 의원을 압박하고 있다. 강전 장관은 탄탄한 조작기반과 높은 인지도를 무기 삼아 표밭을 다지고 있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

광산구에서는 송병태 전 광산구청장이 무소속으로 국회입성을 노리고 있다. 민주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무소속으로 선회한 송 후보는 구청장 시절부터 달아놓은 인맥과 조직력을 활용, 상대인 김동철 의원의 기반을 공략하며 '결코 무시하지 못할' 맞수로 자리 잡고 있다.

전남 고흥·보성에서도 진종근 전 고흥군수가 무소속 출마를 단행, 민주당 공동대표인 박상천 의원을 상대로 '인물론'을 내세우며 날카로운 공격을 펼치고 있다.

◇DJ 촉근도 강세=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목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민주당에선 정영식 전 행자부 차관이 대

4·9총선 후보 확정 이후 첫날인 27일, 광주·전남에선 모두 93명의 후보가 20개의 자리를 놓고 물려갈 수 없는 경쟁을 시작했다. 선거결과가 나오기까지 12일이 남았지만, 최근 무소속 후보들의 약진과 장·차관급 정치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지역에선 벌써 이들의 강세를 짐작하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이 3명이나 출사표를 던진 것과 관련, '김씨'가 얼마나 먹힐 것인지'를 둘러싸고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 남, 광산갑, 전남 고흥·보성 무소속 약진

박지원·김홍업·한화갑 승패도 전국 관심사

항마로 나섰지만, 박 전 실장 개인의 인지도와 지역의 동정론에 막혀 큰 힘을 발휘하진 못하는 듯한 모습이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박 전 실장과 정 전 차관이 막상막하의 지지를 을 기록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인 김홍업 의원 역시 무소속으로 무안·신안에 출마, 표밭을 다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민주당 후보인 황호순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다소 밀리는 듯한 모습

이지만, DJ 또는 어머니인 이희호 여사의 지지율은

역구 방문 가능성을 비롯 DJ변수가 상존한 상태여서 속단은 이르다는 관측이다.

'리틀 DJ'라 불리는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후보 등록 마감일이 닥쳐서야 무소속으로 광주 북구갑 출마의사를 밝히며 막차를 탔다. 한 전 대표는 그러나 일부 전·현직 지방의원들의 강력한 지지와 전국적인 인지도에 힘입어,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아성을 허물' 막강한 경쟁상대로 떠올랐다.

◇정치신인 활약 거세=광주 광산구에선 건설부장관·행자부장관·국세청장·관세청장 등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이용섭 후보가 민주당의 치열한 공천 경쟁을 끊고 본선티켓을 확보, 본선에 나섰다.

또 서구갑에서는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장을 지낸 조영택 후보가 역시 민주당 공천자로 확정돼 표밭을 갈고 있다.

선거구 통폐합으로 신설된 해남·완도·진도에선 김영록 전 전남도행정부지사가 무소속 출마를 결행, 민주당 후보인 민화식 후보와 일전을 겨루고 있는 상태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한 "안정 위한 과반의석 달라"

민 "견제위해 100석 확보해야"

4월9일 치러지는 18대 총선의 공식 선거전이 27일 막을 올렸다.

이번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해 여대야(與大野小) 구도 형성에 성공할지, 아니면 통합민주당이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넘겨 군소야당들과 함께 여소야대(與小野大) 의석분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최대의 관심거리다.

한나라당은 과반인 150석을 넘기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있고, 한 발짝 더 나아가 국회 내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정 과반의석인 168석 확보를 2차 목표로 삼고 있다. 한때 200석을 넘길 수도 있다는 낙관적 전망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40% 이상의 높은 정당 지지도를 확보하고 있어 과반 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한나라당은 과반의석 확보를 위해 서는 이회창 총재의 자유선진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충청권의 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충청권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공식 선거운동 첫날 대전에서 선대위원장인 강재석 대표 주재로 중앙선대위 회의를 열고 득표전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선 직후 지지도가 추락했을 때만 해도 총선에서 '60석만 넘기면 다행'이라는 식의 비관적인 전망이 팽배했으나, 개혁 공천, 이명박 정부의 내각 인사파동과 정책 혼선, 한나라당 공천 갈등 등을 거치면서 여론의 흐름이 바뀌자 개헌저지선인 100석 확보로 목표를 늘려 잡았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80석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원장인 손학규 대표는 이날 새벽 0시 동대문시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데 이어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어서 국민에게 선사한 것은 부자내각, 측근정치, 형님정치"라며 "1% 부자정당의 오만과 독선을 막기 위해 건전한 견제 세력인 민주당에 힘을 몰아달라"며 지지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또 군소야당과 '반(反) 대운하 정책연대'를 부각시키는 등 한반도 대운하 실행 저지를 위한 정치 세력 형성을 유권자에게 호소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또 하나의 관심을 끄는 포인트는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친(親)박근혜 인사들의 '친박연대'와 '친박무소속연대' 후보들이 영남권 등에서 선전할 지와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력 인사들이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킬지 여부다.

/연합뉴스



거리로…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7일 서울 종로 구민회관 앞에서 열린 거리유세에 앞서 시민들과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시장으로…
27일 대전 중구 중앙시장에서 한나라당 강재석 대표와 대전 출마자들이 이상인들을 만나 기호 2번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4·9 총선 이슈

④ 소지역주의 되살아나나

전남 선거구 조정 후유증
후보들이 되레 부추기기도

정책 실종… 은근히 "지역 출신 밀고 보자"

광주 지역 일부 향우회 밀어주기 움직임

통합민주당 등 각 정당의 18대 총선 공천이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벼락치기로 이뤄지면서 소지역주의가 뒤살아날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

정책은 물론 이슈와 쟁점초자 분명치 않은 총선 구도가 전개되면서 우선 지역 출신 후보를 밀고 보자는 소지역주의가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특히 전남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가 대폭 조정된 데다 민주당의 공천에서 탈락한 비중 있는 인사들이 대거 무소속 후보로 나서면서 소지역주의는 선거 막판까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우선 소지역주의는 도심 생활권인 광주보다는 2~3개 군이 한 개의 지역구로 둑어있는 전남에서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당장 해남·진도·완도 지역구는 '소지역주의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기준 해남·진도의 지역구에 완도가 편입되면서 해남·진도와 완도의 대결구도가 은근히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를 반영하듯 각기 출신 지역이 다른 각 후보 진영에서는 서로 유리한 지역 구도를 거론하며 은근히 소지역주의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또 무안·신안 지역구에서도 소지역주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지난 10여년 이상 신안 출신이 국회의원을 독식한 만큼 이제는 무안 출신이 여의도에 입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안 출신 후보 진영에서는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무안·신안의 발전이 더딘 것은 국회의원의 출신 지역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의 자질과 차지단체장과의 불협화음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담양·곡성·구례 지역구도 마찬가지, 장성 출신의 김효석 의원이 출마한 데 대해 일부 후보 진영에서 은근히 지역 연고주의를 거론하고 있다. 타 지역 출신 후보보다는 지역구 출신 후보를 밀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남 지역 일부 지역구에서는 현격한 인구 차이로 소지역주의가 사실상 고착화된 지역도 있다. 대표적으로 나주·화순과 강진·장흥·영암·고흥·보성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광주에서도 일부 소지역주의의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일부 후보의 경우, 전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눈총을 받는가 하면 특정 지역 향우회가 대대적으로 지역 출신 후보 밀어주기 현상도 나타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소지역주의는 망국병인 영·호남 지역 갈등처럼 기존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행사하기 위해 조작한 층면이 강하다"며 "소지역주의 편승은 지역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후보의 정책, 미래 전망 등을 놓고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